

與 전국위 소집 의결...이르면 5일 결론

사퇴 밝혔던 배현진·윤영석 등 4명 참석해 가결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내홍' 당분간 지속될 듯 이준석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 지도부 직격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일 비대위 출범 여부가 결론 날 전망이다.

그러나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의 최고위 의결 참여 등을 놓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비대위 성격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재직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

회의에는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재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의 경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 의결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중 전국위 개최 공기가 이뤄지면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일 상임전국위·전국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전국위에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건이 상정된다. 당헌 96조에는 '당 대표 권위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 상실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

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같은 비대위 출범 요건을 만족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전국위에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상정된다. 당헌 96조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데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넓히도록 당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형수 원내대표인은 "전국위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정리될 것"이라며 "대면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를 정해서 가능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으면 아직 사퇴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절대반지'

에 비유해 "절대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며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하는군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단 중 가장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전국위 등을 통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를 '당원권 정치 6개월 징계'와 별개로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現정부의 前정부 인사 사퇴종용 직권남용”

김희재, 민주 정치보복대책위 모두발언 통해 비판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전 정부의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현 정부가 공모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은 지난 1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정권의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사퇴종용과 압박은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모해 정부와 집권여당, 감사원 등이 공동의 범행 결의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공동실행 의사가 명백하며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독립



성과 중립성을 외면한 채,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밝히며 청부·표적 감사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정, 사정기관이 '원탐'이 돼 직권남용을 공모한 공범"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찰이 현 정권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편향된 정치보복 수사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김원이 “전남권 의대 신설 강력히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2일 열린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 값이 다를 수는 없다”는 평소 지론을 밝히며, “후반기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는 이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상대로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전남)의 의대 신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는 것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당시의 정형의제에서 코로나 19안정화 이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백경란 질병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관련 방역대책을 질의했다.

그는 “자율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각자도생,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비판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당부했다. /김진수기자

여의도 클럽

이형석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은 2일 “기초의회 중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됐는데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득표율이 분산



돼 소선거구에 비해 15% 이상이란 득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선거구에서 당선자와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하향해 10%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5% 이상·10% 미만 득표한 경우 반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김진수기자

민주 당권주자 '李·朴·姜' 전면전 개막

'97 단일화' 먹구름...강원·PK 권리당원 투표 시작 이재명, 민생·통합 앞세워 '대세론 췌기' 전략 유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자 3인방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8·28 전당대회 지역경선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재명·박용진·강훈식(기호순) 후보 간 전선이 바짝 고조되는 분위기다.

주자들은 2일 오후 강원에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나섰다. 유력 주자인 이 후보는 민생과 통합을 앞세워 '대세론 굳히기'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유능한 대안야당' 로드맵을 강조하며 비전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자신의 각종 실화를 빌미로 한 두 후보의 공격에는 자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전면전은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박용진·강훈식 의원은 속내가 복잡하다.

'1강 이재명'을 집중해 때리면서도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형세에 놓여있다.

당장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지만, 진도를 빼지 못한 단일화 논의도 골치거리다. 지지부진

한 협상에 일각에서는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두 후보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할 때부터 당내에서는 단일화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가 많았다.

둘 다 같은 계파색이 열린 재선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녔지만, 그간 정치 행보를 볼 때 교집합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당 고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의 단일화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강 후보는 애당초 단일화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했다.

앞서 당 선관위가 중도사퇴자의 표는 모두 무효로 처리기로 한 것도 단일화

무산 관측에 더욱 힘을 실고 있다. 설령 단일화가 이뤄진다 해도 투표 개시 이후라면 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 후보가 지역 투표 시작일인 8월 3일을 애초 단일화 시한으로 내걸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강 후보는 이날도 단일화 속도전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자꾸 단일화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더는 단일화 협상에 목매는 스탠스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주말 강원·대구·경북(6일)과 제주·인천(7일) 경선에서 '확실한 2위'를 증명해 단일화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